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

2021년 12월 31일

국 무 총 리 김 부 겸

국 무 위 원  
환 경 부 장 관 한 정 애

●대통령령 제32300호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의2(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13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

제37조의3(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)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(이하 “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”이라 한다)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.

③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람
2.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

④ 환경부장관은 전문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소속으로 비상임의 조사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37조의4(자료제출의 요청) ①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서 “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피해자 및 유족, 법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·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통계청
2. 지방자치단체
3.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과 그 유족,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(이하 “구제급여대상자”라 한다)과 그 유족
4. 살생물제품 제조·수입업자 및 살생물제품 판매·유통업자
5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
6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
7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·감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·법인·단체

②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서 “주민등록·가족관계등록·의료기록·건강보험·살생물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·초본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

2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
3. 「의료법」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과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
4. 「약사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
5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기록과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
6. 살생물제품의 성분, 배합비율, 유해성, 제조·수입량 및 판매량 등 제품 및 판매에 관한 자료
7. 「통계법」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 중 사망원인통계에 관한 자료
8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1조제1항제1호의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과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
9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·감정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
제37조의5(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)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②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하려는 구제급여 대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
제37조의6(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·운용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4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(이하 “살생물제품피해구제계정”이라 한다)을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.

② 법 제48조의15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.

1.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
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

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5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.

제37조의7(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48조의15제5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(이하 “구제계정운용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한다.

가.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(이하 “살생물제품피해”라 한다)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
나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
다. 자산운용, 재무관리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37조의8(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·징수 등) ① 환경부장관(제3항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·징수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제37조의10 및 제37조의11에서 같다)은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(이하 “분담금”이라 한다)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,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분담금 납부고지서에 적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(이하 “원인제품”이라 한다)의 제조·수입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.

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·징수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.

④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른 원인제품사용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한 원인제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.

1. 원인제품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원인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

2. 제7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원인제품의 제조·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. 이 경우 사람의 수는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의 수에 제7항에 따른 분담금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

⑤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른 원인제품판매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.

1. 원인제품의 총판매량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·감정 등을 통하여 확인된 원인제품의 판매량으로 할 것

2. 제7항의 원인제품 제조·수입업자의 판매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량은 제외할 것

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인제품 제조·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상법」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원인제품 제조·수입업자

2. 폐업,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원인제품 제조·수입업자

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인제품 제조·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.

1.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: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

2.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(中企業):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

제37조의9(가산금) 법 제48조의16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제37조의10(이의신청) ① 법 제48조의16제9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서면, 전자우편, 팩스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말한다.

② 법 제48조의16제9항 전단에 따라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결과를 통보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7조의9에 따라 가산금을 계산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

제37조의11(분담금의 분할납부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10항에 따라 원인제품 제조·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원인제품 제조·수입업자(제2호의 제조·수입업자는 제외한다)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: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
2. 원인제품 제조·수입업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: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2회 이하

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제37조의8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
1.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
2. 「국세징수법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37조의12(진찰요구 등)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7에 따라 진찰, 검사,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.

제37조의13(구제급여의 일시 중지) ① 법 제48조의18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구제급여대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8제1항에 따라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사람이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.

④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같은 항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시정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.

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4조제2항”을 “법 제54조제2항 및 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의 접수와 신청 내용의 검토
  - 8.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·감정 등
  - 9.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의 접수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결과의 통지
  - 10. 법 제48조의7 및 법 제48조의8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과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
  - 11. 법 제48조의9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여부의 검토지원
  - 12.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접수와 청구 내용의 검토
  - 13. 법 제48조의17에 따른 진찰·검사·조사 등의 요구
  - 14. 법 제48조의18에 따른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여부의 검토지원
-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업무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에 위탁한다.

제6장에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환경부장관(법 제48조의15제4항,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제1항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- 1.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
- 2. 법 제48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무
- 3. 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
- 4. 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
- 5.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심사·결정에 관한 사무

제40조 중 “법 제60조제1항”을 “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카.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60조제2항	300	400	500
---	-----------	-----	-----	-----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피해\*가 발생한 사람에게 피해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, 피해구제를 위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조사·연구를 수행하는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,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의 제조·수입업자에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·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170호, 2021. 5. 18. 공포, 12. 31. 시행)됨에 따라,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,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의 갱신 절차,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운용방법,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·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\* 살생물제품피해: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(후유증을 포함함)

### ◇주요내용

#### 가.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(제37조의3 신설)

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화학·환경·보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,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등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함.

#### 나.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(제37조의5 신설)

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,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.

#### 다.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·운용(제37조의6 신설)

- 1)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예의 예입, 금전신탁이나 증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.
- 2)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업무 중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의 지급,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,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경비의 지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함.

#### 라.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(제37조의7 신설)

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·운용 등을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.

#### 마.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·징수 등(제37조의8 신설)

- 1)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납부금액,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원인제품의 제조·수입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.
- 2) 환경부장관은 폐업,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원인제품의 제조·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.
- 3) 환경부장관은 소기업인 원인제품 제조·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의 3분의 2를, 중기업인 원인제품 제조·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.

<법제처 제공>